

Y2K

## Y2K 해결 최우수국가는 「한국」

김기만 / 매일경제TV 산업부 차장

### 한국의 Y2K 대응 속도 세계 10위권

전세계 국가들이 Y2K 문제에 대응해온 속도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손쉽게 연도단위로 구분해본다면, 미국과 호주가 96년경부터 준비를 해온 1군집단에 속한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99년 초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 상대적으로 대응 속도가 늦은 3군집단에 속한다. 그리고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대응을 보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4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라는 일본, 싱가포르 등과 함께 98년부터 대응에 나선 2군집단에 속한 국가다. 그러나 IMF라는 예상밖의 복병을 만나면서 대응력이 다소 약해진 바 있었다.

따라서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Y2K 대응력 약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Y2K 대응에 나서왔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IMF 위기의 최고조를 다소 넘기는 시기였던 98년 하반기부터 Y2K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돼 왔고, 99년 초를 기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우리나라 언론을 장식한 듯싶다. 그러나 Y2K 문제는 단순하게 연도자리수를 변경 또는 확장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것만이 대응

은 아니었다. 즉,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보화 대응에도 해결 방법이 포함돼 있었다.

98년 말부터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ERP(전자적 자원관리)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고, 각 단체에서 자금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시기에는 시스템 통합 사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된 바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축으로 하는 정보화 리모델링 및 신 소프트웨어 도입 역시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실행을 했다. 이는 정보통신집 협회가 집계한 전 세계 국가별 정보화 속도 발표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이 10위권 안에 진입한 시기가 바로 98년 말과 99년 초를 전후한 시기라는 점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Y2K 대응 속도는 전세계 단순 연도자리수 변환 말고도 Y2K 해결 순위를 정보화 속도로 비례해서 분석한다면 역시 100위권 안에 이미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Y2K 대응 속도의 가속화도 가장 빨라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한국인의 장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Y2K 대응 속도는 세계 1위권이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보는 시

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분석기관은 우리나라의 Y2K대응수준을 전세계 국가를 5군으로 분류할 때 4군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지만, 2군과 1군사이로 보는 분석기관이 더 많았다.

Y2K문제 취재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본사(매일경제TV-세계최초의 Y2K문제해결을 위한 밀레니엄버그 TV강좌 1년6개월 집중방송)의 자체 조사결과 이를 분석기관이 상이한 자료를 발표한 이유를 예상 밖의 변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개에 이르던 Y2K대응상황 분석기관들은 대부분 한국에 전문가를 실제로 파견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들 기관들은 자국의 한국내 상무성이나 대사관, 그리고 자국의 정보기관 수집자료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근거로 일종의 점수를 매겨왔다

이들 모두를 근거로 한국의 Y2K점수를 산출한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일부는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의 Y2K대응수준을 평가절하해 발표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가 공동으로 즉각 수정을 요청하고 바로 수정이 됐다는 점에서 반증이 가능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의 Y2K문제를 점검하던 해외기관의 경우 국가별 Y2K대응정도가 급격하게 상향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정보화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집단에 우리나라가 속해있었다는 점과도 꽤를 같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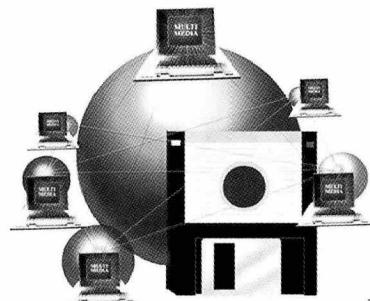
흔연일체가 돼 Y2K대응을 진행해왔고 실제로 한국인 스스로가 위기대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 반면,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인정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만하다.

### Y2K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2000년을 넘기면서 Y2K문제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분분하다.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제기됐었지만 일부선진국들의 상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과 Y2K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했기때문이라는 분석 그리고 종말론에 상술까지 혼재돼 예측불허의 1999년 12월을 보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들과 컴퓨터 전문가 물리학자에서부터 미래학자에 이르기까지 Y2K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시각은 적었다. 그만큼 Y2K문제는 절대정명의 해결대상이었지 확률점치기 대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중대한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Y2K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리라본다. 여기다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





다. 돈을 거  
의 들이지  
않은 국  
가와 천  
문학적인  
돈을 들인  
국가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일단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다.

첫번째는 Y2K문제의 발생가능 대상은 매우 다양했던 반면 Y2K문제의 핵심은 데이터관리에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Y2K문제가 발생한 분야도 일반적인 데이터 입출력분야였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중인 기간 산 산업의 장치나 기기의 경우 과거의 누적된 데이터를 주로 다루기보다는 컴퓨터의 고유특성에 해당되는 상시연산기능이 주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점이 Y2K문제가 큰 사건 사고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생략하겠지만 누적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연도인식 오류와 기기동작 오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대응이 실효를 거둔 것 만큼은 분명하다. 13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반복된 대처와 대응수준 체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Y2K대응 모델로 이를 많은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대상이라고 본다.

세번째는 Y2K문제가 실제보다 과장된 점이 없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Y2K문제를 고의로 애써 과장했던 집단보다는 실제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지적했던 집단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상술차원에서

Y2K문제가 부각된 경우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 Y2K 얻은것은 무엇인가?

후진국들이 돈 한푼 안들이고 Y2K문제를 무사히 넘겼다고 부러워할 일은 전혀 아니다.

Y2K문제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일단 넘겼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유사 Y2K범주의 문제들도 현재로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Y2K문제를 통해 얻은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얻은 것은 많다고 본다.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얻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경쟁력이다.

요즘 국가간 정보화능력 차이가 엄청난 부가 가치로 이어진다. Y2K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국가저력이 근간이 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을 다른 국가에서 배우려울 정도에 올라와 있다.

특히, 향후에 전세계 정보통신산업의 공적은 해킹이나 통신망 교란세력, 사이버전쟁 등의 대응능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Y2K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벽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때는 바로 지난 2~3년동안 우리 정부와 관련단체에서 경험했던 Y2K대응과정이 큰 도움이 될 듯싶다.

여기다 앞으로의 난제는 국부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국부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Y2K해결과정은 한국사회전반에 큰 저력을 쌓아주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Y2K